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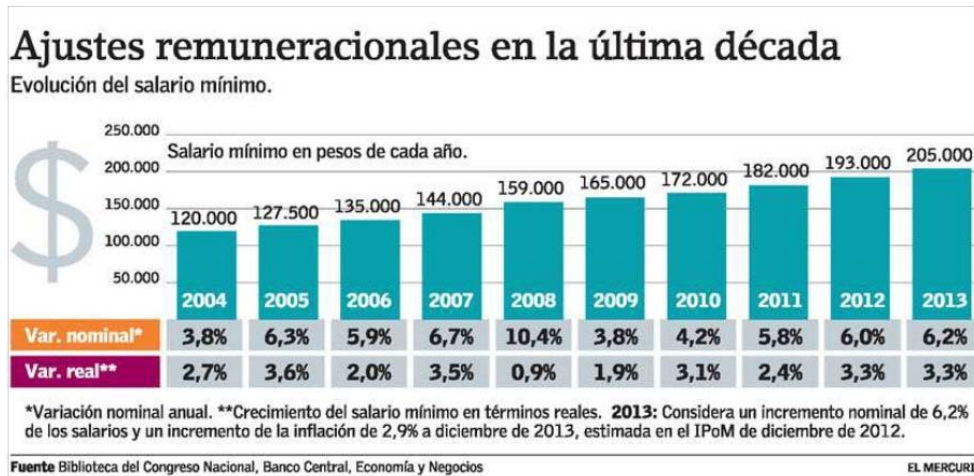
## 칠레의 최저임금 논란으로 본 소득불평등

김순배

칠레 산티아고 시내의 버스를 타려면 줄을 서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뜻하지 않게 앞 사람의 교통카드 잔액을 보게 된다. 카드를 들이대면 잔액이 자동으로 표시되는데, 그 잔액이 1~2천페소, 우리 돈으로 약 2천3백원에서 4천6백원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한번 타는데 평균 590페소니, 교통카드에 1~2번 탈 잔액 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하루는 카드를 충전하려고 집 앞 은행에서 줄을 섰는데 사람들이 ‘천5백페소’, ‘2천페소’하면서 충전하는 것을 보게 됐다. 충전하려고 줄 서기가 귀찮아서 한 번에 최대 금액인 2만5천페소까지 충전하는 나로서는 한동안 이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칠레 친구의 말을 듣고서야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 사람들은 교통카드에 5천 페소 넘게 충전해서 놓고 다닐 여윌돈이 없어.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최저임금을 받고 칠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칠레 민간연구소 ‘자유와 발전’(Libertad y Desarrollo)이 지난 4월에 분석한 자료를 보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 노동자 약 450만명 가운데 유통분야 등에 종사하는 37만 명이(약 8.1%) 2011년에 최저임금을 받았고, 가사 도우미 등 계약이 없이 일하는 노동자 약 33만8천명이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를 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최



최근 10년간 칠레 최저임금 추이 출처: 「메르쿠리오」(Mercurio) 2013년 3월20일 B6면.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약 3분의 1이 자신의 소득이 유일한 가구소득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칠레에서는 2013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논란이다. 세바스티안 피네라 정부는 3월 말 월 19만3천페소인 현 최저임금을 20만5천페소로 6.2% 인상하는 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한 달에 1만2천 페소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하 양원에서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5월 19일 현재까지 두 달 넘게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 및 노동계는 정부안보다 대폭인상을 해야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야권은 최소 21만 페소, 칠레 최대 노동조합단체인 중앙노동자총연맹(CUT)은 25만 페소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네라 정부는 이번 인상안이 올해 물가인상률 3.3%보다 높고,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주변국에 비해 높다며, 대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금을 월 1,673~8,225페소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칠레 일간지 「테르세라」(Tercera)가 3월 20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칠레의 현 최저임금 19만3천페소는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409달러로, 우루과이(405달러), 브라질(339달러), 에콰도르(318달러), 볼리비아(144달

러)보다 높다. 하지만, 칠레 언론이 자국의 OECD 가입 이후 흔히 비교하는 OECD 회원국과 견주면 상당히 낮다. 각국의 구매력 평가지수(PPP)를 적용해 최저임금을 환산하면, 칠레 정부안대로 20만5천페소로 인상하더라도 시간당 2.3달러 수준이다. 프랑스(10달러), 미국(7.3달러)은 물론 스페인과 한국(5.3달러), 폴란드(4.3달러), 헝가리(3.5달러)보다 훨씬 낮다. 다만 멕시코(0.9달러)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이 신문이 비교 보도한 24개국 가운데 23위다.

인상폭을 둘러싼 견해차는 철학의 논쟁이다. 지난 4월 ‘자유와 발전’은 자유주의 싱크탱크답게,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등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역효과를 내고 기업에 부담을 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최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47%가 2~49인 사업장에 일하고 있어, 최저 임금의 인상이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대기업과 경쟁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보수 정치권의 목소리와 일치한다. 전 경제부장관이자 독립민주연합당 UDI: Partido Unión Demócrata Independiente) 대선 후보로 나선 파블로 룡게이라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을 25만 페소로 올리자며 선동하기는 쉽지만, 최저임금 노동자 대다수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사실 주변국의 값싼 노동력 공급이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측면도 있다. 한 예로, 페루 여성은 칠레 가정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차별을 받기도 하지만 이것도 큰돈이다. 내가 보낸 돈으로 페루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간다’고 말하는 현실이다.

노동단체 등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검증된 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앙노동자총연맹(CUT) 바르바라 피게로아 위원장은 4월 3일 의회 재무위원들과의 면담에서 “정부 통계에 따르면 25만 페소 인상 안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PPD: 민주당(Partido por la Democracia)

의 호르헤 타루드 하원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5만 페소로 인상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20만5천 페소로는 한 가정이 생존하기에 필요한 액수에서 한참 멀다”고 지적했다. ‘칠레 21 재단’(Fundación Chile 21) 같은 진보적 싱크탱크도 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명확하지만,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하느냐는 일면 허무한 논쟁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월령 25만 페소, 곧 현재보다 월 5만7천 페소가 늘어나더라도 칠레에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액수이기 때문이다.

요즘 칠레에 도착한 많은 한국인은 비싼 물가에 놀란다. 햄버거 세트가 보통 3천3백페소 안팎이다. 생수 한 병은 보통 5백페소, 오렌지 주스 1리터가 천8백페소 수준이다. 한국보다 결코 싸지 않다. 국립대인 칠레대학교 학생식당 점심 값이 1천8백에서 2천1백페소 수준이다. 그러니 슈퍼마켓에서 이것저것 사다보면, 2~3만 페소를 훌쩍 넘는 때가 많다. 인터넷과 유선방송을 묶은 정보통신 요금은 월 4만6천934페소다. 최근 1년 안팎 기간으로 연수를 오는 한국인들은 원룸 오피스텔을 많이 얻는데, 한 달에 45만 페소 정도를 줘야 구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공공요금은 더 만만치 않다. 이달치 전기료가 1만 페소가 나왔다. 가스요금은 3만4천717페소, 수도료는 1만5천페소다. 추운데도 가스비가 비싸서 보일러를 안 켜고 전기장판을 쓰고 있으니, 다음 달 전기료는 한참 더 나올 게 뻔하다. 최저임금이 20만5천페소든 25만페소로 오르든, 칠레의 현 물가수준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그래서 칠레에 오는 한국인들은 칠레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말 그대로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그동안 살아온 보통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고 그런 수준으로 칠레에서 살기 위한 비용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곧, 칠레 저소득층은 최소한 경제적 면에서는 훨씬 낮은 삶의 수준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의료보험이 없거나, 점심



무상 공교육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2013년 5월 산티아고)

을 싸다니거나, 낡아 한국 사람들은 좀체 매고 다니지 않을 것 같은 가방을 매고 다닌다. 저소득층 자녀는 무료인 공립학교에 보낸다. 대학은 가지 못하거나 입학하더라도 좋은 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은 무척 낮다. 2011년 대학입학시험(PSU) 성적을 보면, 수학 과목의 경우 공립학교 평균은 470점인 반면, 사립학교는 평균 614점을 기록했다. 저임금은 현재의 저소득 계층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자녀의 미래의 삶조차 움아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 문제는 칠레 저소득층의 삶의 질, 소득불평등의 문제와 닿아있다.

한번은 수업 시간에 중산층 문제를 다루었다. 중산층의 정확한 의미 및 계산법을 다루는 수업이었다. 그런데 그날 논의는 사실 이런 것이 칠레에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냐는 결론 아닌 결론에 닿고 말았다. 칠레는 이른바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진입했다지만, 2011년 칠레 전국 사회조사통계(CASEN)를 기준으로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14.4%에 이른다. 전체 인구의 2.8%인 47만2천명이 한달에 3만6천49페소 이하로 살아가는 극빈층이다. 2011년 평균 임금은 39만365페소로 조사됐다.

이런 현실에서 심각한 소득불평등은 이른바 중산층에 대한 논의를 무색하게 만든다. 2011년 전국사회경제조사(CASEN: Caracterización Socioeconómico Nacional) 기준으로, 상위 6분위 가구 소득은 55만7천페소, 7분위는 67만6천페소, 8분위는 88만6천페소, 9분위는 122만3천페소다. 한 달 가구소득이 300만 페소를 넘는 최상위 10분위를 빼면, 칠레의 생활비를 고려할 때, 중산층이 진정한 중산층으로서 일정한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다.

몇 백 페소가 아쉬운 사람들 반대편에는 또 다른 세상도 있다. 산티아고의 동북쪽 지역을 보면, 수영장과 잔디가 깔린 넓은 집들이 들어차 있다. 불평등 지수에서 세계 1위를 다투는 칠레의 현실이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55(2009년)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최악이자(한국은 2008년 기준 0.314로 OECD 평균이다), 전세계 조사대상 160개국 가운데 141위다.(CEPAL 2012) 솔재단(Fundación SOL)에 따르면, 칠레는 현재 상위 5%가 하위 5%보다 260배나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이 지적했듯, 오늘날 인간의 삶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상대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마련이고, 그만큼 상대적 박탈감이 중요하다. 사정이 이러하니 정부의 최저임금 월 1만2천페소 인상안은 해당 계층에게는 서글프다.

결국 문제는 칠레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느냐다. 칠레에 살다보면, ‘칠레가 ○○기준(또는 결과)으로 OECD에서 몇 번째를 기록했다’는 식의 보도를 자주 접하지만, 이른바 이들 선진국들 다수의 지향과는 멀어 보인다. 최저임금에 관한 담론에서 드러나듯, 칠레는 성장위주의 담론이 압도적이며, 그 틀 안에 갇혀 있다. 그런 구조 안에서 불평등한 소득분배가 장기적으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밀려나기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칠레의 학생 시위가 몇 년째 이어지는 것은 한편 당연해 보인다. 시위에 나서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오래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의 학자금 이자율 인하 등에 대해 학

생들은 “화장을 고친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학생들은 소득불평등이 교육기회를 빼앗고 빈부격차를 재생산하는 사회구조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반영한 가구별 소득은 칠레의 사회구조를 잘 드러낸다. 보조금을 더해도 하위 10%의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에서 1.7%로 다소 늘어날 뿐, 하위 2분위 소득은 2.9%에서 3.2%, 하위 3분위 소득은 4.0%에서 4.2%로 큰 차이가 없다(이상 CASEN 2011). 정부의 개입에 따른 재분배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인 것이다.

칠레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미첼 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출마를 선언하면서 불평등 개선을 기치로 내걸었다. 바첼레트 재임기간(2006~2010) 최저임금은 평균 6.7% 인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실질 인상률은 평균 2%로 피네라 재임기간 실질 인상률 3%에 못 미친다. 좌파연합 콘세르타시온은 20년간 집권했지만, 피노체트 이후 이어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틀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첼레트가 재집권하더라도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획기적 변화는 의문스럽다. 게다가 구리가 칠레 수출의 56%를 차지하고, 세계 최대 구리 생산업체 칠레구리공사(CODELCO)가<sup>1)</sup> 정부 재정수입의 15%(이상 2010년 기준)를 기여하는 구조에서 국제 구리 가격이 하락세다. 2011년 파운드당 4.5달러에 이르던 구리 가격은 5월 17일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7월 인도분 선물이 파운드당 3.31달러에 거래됐다. 26%가 떨어진 가격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나 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가는 길은 창 너머 안데스 산맥처럼 험난해 보인다.

---

김순배 - 칠레대학교 사회과학 박사과정

---

1) 2012년 기준, 전세계 구리의 10%, 175만 톤을 생산했으며 구리산업에 의존하는 칠레의 얼굴이라 할 거대 국영기업이다. 1971년 살바도르 아옌데 정부의 조치로 구리 광산기업들이 국유화되고 이후 통합되면서 1976년 세워졌다.